

# “수능 40% 강제, 지방대에 타격… 대입 자율성 달라”

## 대학교 입학처장協

수능전형 확대 등 교육부 방안에 입학처장協 “공교육 위축” 반박 “대학환경 고려, 자율성 보장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일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학 입학처장들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학들은 ‘수능 전형 확대’와 ‘학생부 비교과 축소·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 방안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대학들은 특히 교육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전형 40% 이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 대학들의 학생 모집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 이하 입학처장협의회)는 16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통해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의 실력이 아닌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학종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

다. 학종 선발이 많은 서울 16개 대학에는 2023학년도까지 수능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을 압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올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통해 대학의 수능 선발 비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교육공약으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조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자 13개 대학의 학종 전형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그에 따른 특정 감사와 종합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

상적인 대입 제도’라며 교육부가 도입한 학종을 10여년 만에 다시 폐지에 대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과 전문가의 견보다는 여론의 눈치에 따른 방안이란 지적도 나왔다.

우선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종에 대한 시각부터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고교가 대학에 입시 목적으로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을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고 등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학들은 지원 학생의 학생부 내용을 맥락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의 학종 고교 블라인드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도 고교프로파일이 특정 유형

고교에 유리하게 사용됐다는 정황을 확인했을 뿐, 프로파일을 활용해 고교별 가점 부여 등 실제 증거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고교정보와 고교프로파일은 특정 고교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 고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며 “기재금지사항 내용은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재금지사항 문제는 양식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학종 서류평가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한다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을 드러내는데 대해 대학들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근거로 부정확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교육부도 실태 조사 결과 시스템상 오류로 실제 서류평가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현 고1~중3 대입에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에 이어 현 중2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을 대입반영을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문항 글자 수 축소에 이은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학종의 사실상 폐지와 급격한 평가 자료 축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학생부 특정 요소를 관리하려는 치열한 경쟁과 기록의 부풀림, 학교와 교사 간 기록 편차에 따

른 유불리 상황이 더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학교 내 자율활동이나 자치활동, 독서토론 교육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선발 40% 이상을 권고한데 대해서는 대학의 입시정책 혼란과 수능 중심 개편에 따른 사교육 확대 등 교육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다시 대입제도를 바꿈에 따른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과정 중심 등의 수업이 위축되고 교실 수업이 문제 풀이 위주로 돌아가 공교육 퇴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국민 여론을 교육정책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대입정책 패러다임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학종의 정성평가 원칙에 부합하도록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정 대학을 선택해 일부 전형 선발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대학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항공MRO단지 조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기본계획에서 항공정비단지(MRO)를 추가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 인근에 약 164만m2(약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2023년 인천에 ‘항공기정비단지’ 조성

인천공항, 부지 164만㎡ 확보

항공기정비단지(MRO)를 조성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 정비단지 인근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활성화를 꾀하지는 못 직업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제4활주로 서북측 164만㎡에 항공기정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MRO는 정비(Maintenance)와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사업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성능향상 지원을 위해 운항정비와 기체중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등을 하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202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기본계획에서 항공정비단지(MRO)를 추가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 인근에 약 164

만㎡(약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4단계 건설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에 MRO 단지가 신설되면 연1.3조원 규모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항공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많은 항공사들이 싱가포르와 중국 등 해외에서 항공기 정비를 위탁하는 실정이었다.

MRO 시장은 올해 820억달러(96조 원)에서 2029년 1160억달러(136조 원)로 연평균 3.5%씩 성장하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프랑스 드골공항, 중국 상하이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등 항공기 200대 이상을 보유한 국가의 관문·지방공항에는 항공정비 클래스 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와 한국만

/인천취재본부=김창근 기자 mirex@

## 인천시 ‘I-멀티모달 서비스’ 개발 추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 3년간 총 180억 투입, 역량 집중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에 뽑혀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인 ‘I-멀티모달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지방정부·민간 기업·대학 등 아이디어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따위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영종국제도시 대중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인천스마트시티·연세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I-MoD(Incheon-Mobility on Demand) 버스 서비스’를 개발해 효용성을 증명했다.

이 서비스는 버스, 전동킴보드 등을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자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성과를 인정받아 본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인천시는 I-MoD 버스 서비스를 확대한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인 ‘I-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I-멀티모달 서비스는 I-MoD 버스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이용자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교통 취약지역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는 3년간 국비 100억원과 참여기업 80억원을 받아 이 서비스를 개발을 추진해 버스·택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시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운수사업자와 상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對美 무역흑자 15% 늘었지만… 적자 대상국 한단계 하락

美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보고서’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가 15% 늘어났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순위에선 14위로 한단계 내려갔다.

16일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6억달러(24조4000억 원)로 전년의 178억달러보다 28억달러 늘었다.

다만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전년 13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미국의 대한민국 상품 수출입을 보면 수출은 전년보다 0.7% 늘어난 569억달러, 수입은 4.4% 늘어난 77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가파른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적자는 2017년 231억달러에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영향으로 큰 폭 줄었지만, 자동차 등 한국 주력제품의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시 확대됐다.

